

보도설명자료 (19. 2. 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와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와 관련하여
긴밀히 협업중

(전자신문 2.27일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산업부와 복지부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
긴밀히 협업중
- ◇ 2월27일 전자신문 <복지부는 ‘금지’ 산업부는 ‘허용’... 검사 항목
놓고 부처간 엇박자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- 질병 관련 분야 DTC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산업부와
복지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

2. 同 보도에 대한 산업부, 보건복지부 입장

-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하는 ‘실증특례’는 질병예방
분야 유전자 검사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간 충분한
협의를 거쳐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며,

-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 서비스 전반의 질관리를
위한 인증제 도입과 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의 타당성 검토를
위해 추진되는 것으로, 양 부처는 두 제도의 병행을 상호 협력
하여 추진중임

-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정책과 김대자 과 장(044-203-4510)
박용균 사무관(044-203-4512)
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이수연 과 장(044-202-2940)
배재범 사무관(044-202-2947)